

# 외환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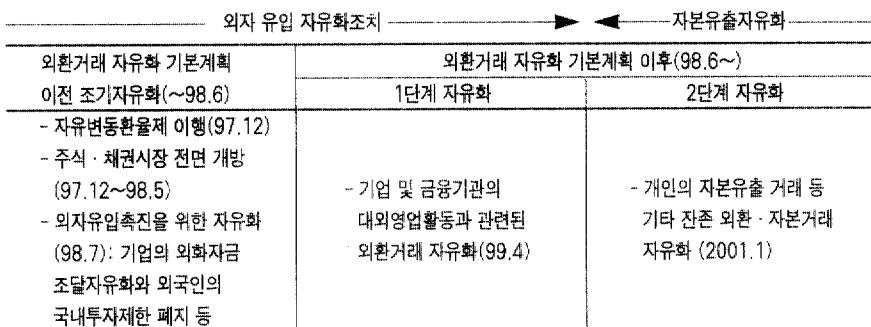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회과학부 경제학 전공

**내**년 1월 1일부터 2단계 외국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된다. 1단계 자유화는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들 자유화 조치들은 지난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직후 IMF와의 협약에 따라 마련된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 계획」(98.6)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단계까지의 자유화 조치들은 주로 외자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데 반해, 2단계 조치는 주로 자본 유출과 관련된 조치들이며, 이로써 한국에서 자본의 유출입 통제와 관련된 형식적 제도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 남아있는 한 자본자유화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자유화는 자본자유화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형식적 틀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로 전면적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환·자본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한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자유화 수준이 낮은 편에 속했던 한국은 단 2~3년에 걸쳐 상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자유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림) IMF 이후 외환·자본거래자유화 경과



위 그림에서 보는 대로, 외자유입 촉진을 위한 조기자유화와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 단기외화 차입, 단기무역신용 등이 모두 허용되었으며, 일부 외환거래에 있어서 실수요 원칙이 폐지되었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 및 유가증권 취득에 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었다. 따라서 2단계 외환자유화는 조세포탈과 자본도피 혹은 환투기의 위험성 때문에 아래까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잔존)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여행경비나 송금, 해외이주비 같은 개인의 대외지급에 대한 한도가 폐지되며, 기업과 개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를 자유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예금이나 신탁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 국내자금 해외유출 우려

이 시점에서 과연 외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자본유출과 투기행위 혹은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체적인 외환위험을 파악하고 금융기관들의 취약한 외환 관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외화자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었지만 외국금융기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대외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뢰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업의 외화거래내역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정도로 대책 아닌 대책을 마련하거나, 자유화 속

도를 조절해서 일부 거래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단계 외환 자유화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자본유출과 같은 2단계 자유화의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다한 단기해외차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외환위기를 막 겪어 단기해외차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앞으로 2단계 자유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또 1단계 자유화 조치는 주로 외환 유입에 관한 것으로서 2단계 자유화에 따른 외환유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2단계 외환자유화에서는 현재 미화 1만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해외여행에 1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계층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아마도 이 한도와 무관할 것이 확실하며, 결국 개인의 대외 지급한도를 없애는 것은 외화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맹목적인 외환자유화 추진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하등의 믿을만한 근거도 없이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맹목적으로 그것도 대단히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및 신용평가회사들이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하면서 자본자유화의 나침반 역할을 떠맡으려 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발자본주의국에서 IMF 등이 주도하는 방식의 경제개방과 자본자유화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를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경제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경우는 지난 10년 간의 미국경제에서나 예를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자기나라 통화로 국제통화를 삼을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경제에서는 자본자유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의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통상적으로 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산업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또 산업구조는 결국 어느 산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투자의 내용과 크기는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화된 자본의 관점에서는 가장 싸게 벅히는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어하지만, 특정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는 투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 국민 경제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다. 한국경제에

충분한 국내저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부족하며,  
그 반대쪽에서는 100조에서 2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들고 있는 기이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서 지금 필요한 투자와 한국에 들어 올 해외자본의 결정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경제적 관점과 세계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율을 쫓아다니는 자본의 관점에서 서로간에 각각 다른 투자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 잠재력은 아주 손쉽게 훼손된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동구지역과 멕시코 등 남미 지역은 빠른 속도로 서구 자본의 하청생산기지로 바뀌고 있는 형편이다.

###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자금난은 우려할 만하다.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 충분한 국내저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부족하며, 그 반대쪽에서는 100조에서 2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들고 있는 기이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동자금은 지금까지는 국내인들의 자본유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2단계 외환자유화를 통해 해외유출이 자유

로워지면 얼마든지 해외투자처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해외에서 빌려다 쓰고, 남는 국내 저축은 해외로 유출되면서 부채와 자산이 함께 증가하는 경제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채와 자산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보유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기 어려우며, 그만큼 국민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과정은 2단계 외환 자유화를 경계로 두 국면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 이전은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가 분리되는 국민이고, 그 이후의 국면은 국내저축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해외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의 대외적 취약성도 증가한다.

앞에서 본 약간 어두운 전망은 지금까지 시행되었고 또 앞으로 시행될 외환·자본 자유화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는 현재의 비뚤어진 외환·자본 자유화 계획이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 나타날 일이기 때문이다. ♦